



하트세이버 수여 19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2분기 하트세이버 배지 및 인증서 수여식에 송하진 도지사(가운데)와 이진재 전북소방본부장을 비롯하여 14명의 수상자가(도민4명, 경찰1명, 119구급대 9명) 하트표시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출장 중 업무처리 가능해져

모바일 행정포털 도입 · PC 행정포털의 각종 게시판 등 모바일에서 열람... 보안성 테스트 'A' 등급

전북도가 출장 중에도 업무처리가 가능한 모바일 행정포털을 도입한다. 20일부터 시행하는 모바일 행정포털은 최근 '모바일 퍼스트' 추세에 맞춰 PC 행정포털의 각종 게시판 등을 모바일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사용자는 경조사와 인사마당, 언론 보도, 공지사항 등 행정포털 내 대부분의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으며, 내부 전자우편과 출장내역, 초과·당직 근무, 오늘의 식단도 확인할 수 있다. 앱 대신 HTML5 기반 반응형 웹으로 개발해 기존 제한이 없고 설치할 필요성도 없으며 화면 크기 제약도 없어 PC와 태블릿, 스마트폰 등 어떤 크기의 화면에서도 작동된다. 보안 강화를 위해 TLS 1.2 구간암호화를 적용,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채서 정보를 빼낼 수 없도록 했으며 국제적인 보안능력 평가 사이트에서 보안성 테스트 결과 'A' 등급을 획득했다. 도 관계자는 "시스템 발전과 더불어 사용자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해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정책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국민 절반 "여름휴가 안간다"

경제적 이유 55.2%... "가겠단" 응답은 21.2%

국민 두명 중 한명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올 여름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9500가구에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여름 휴가를 가지 않겠다는 응답이 57.7%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휴가를 가지 않는 원인은 '영업(사업)상의 이유'(31.4%), '휴가비용의 부담'(23.8%) 등 경제적 이유가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이어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10.6%), '휴가자의 교통혼잡 때문에'(9.5%) 순으로 나타났다. 휴가를 가겠다는 응답은 21.2%로 집계돼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휴가를 떠나는 출발예정일자는 '7월 30일부터 8월 5일 사이'(46.0%)가 가장 많았다. 이어 '7월 23일부터 7월 29일'(13.2%), '8월 6일부터 8월 12일'(10.0%) 순으로 나타났다. 7월 5주~8월 1주에 휴가를 계획하는 이유는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로 인해'(52.3%), '자녀의 학원 입학 등 일정에 따라'(28.1%)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휴가계획은 6월 이전(55.6%)에 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당 평균 국내여행 지출 예상비용은 지난해 64만원(실지출비용)에서 65만8000원으로 약 2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외여행의 경우 430만4000원에서 385만9000원으로 44만5000원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휴가 여행지 유형으로는 바캉스형(바다, 계곡) 70.7%, 자연동화형(산림욕 등) 12.5%, 도심휴가형(호텔 패키지 상품, 소풍) 9.8% 등으로 나타났다.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예상 출국자수는 191만8000명(하루 평균 11만3000명)이다. 하루 평균 전년 대비 25.2% 증가, 평시 대비 18.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해외여행 예정지역은 중국이 26.1%로 가장 많았고, 일본, 동남아, 미주 순으로 전망됐다. 하계 휴가시 휴가 일정은 '2박 3일' 43.2%, '3박 4일' 26.3%, '1박 2일' 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 동반자는 가족·친지 88.9%, 친구 5.3%, 가족·친지+친구가 5.0% 순으로 나타났다. /안진수 기자

전북 집중호우 1억4천만원 손실

이달 초 장마로 도로·주택·농경지 등 피해

이달 초 장마로 도내 농경지 등 150여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내린 비로 이 같은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1억3,700여만 원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도내에는 평균 246.3mm의 집중호우가 내린 가운데 도로와 주택, 농경지, 특산물 등의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1주일여 동안 지속된 비로 주택 1동과 농경지 14.69ha, 농작물 119.5ha(특작 63.2ha, 침수56.3ha)가 피해를 입었다. 주요 피해상황을 보면 진안군 정천면 월령리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일부 구간이 토사로 인해 사면이 10m가량 유실됐으며 장수읍 선장리 국도

19호선과 임실 관촌면 방수리의 지방도 721호선에서도 토사가 유입돼 긴급 복구가 진행됐다. 또 전주시 진북동에 위치한 콩나물 공장 위의 절개지에서 바위와 흙이 무너지면서 지붕이 반파됐다. 팔복동과 우이동에서도 주택 2채가 인근에서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주택과 지하실에 침수가 발생했으나 현재 배수처리가 완료된 상태다. 전주와 장수읍, 계남면 등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 가로수 5그루가 넘어졌고 익산과 김제, 고창 등에서는 5곳의 농경지 8.4ha에 침수가 발생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지역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긴급 복구에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지자체 위기 징후시 '재정주의단체' 지정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이 실시되고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관리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를 통해 각각 운영 중인 '재정진단·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평가' 과정이 재정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재정분석 미흡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해 관리된다. 재정주의단체 지정과 해제 근거도 명확해진다. 현행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근거가 법으로 상향된다. 재정주의단체 지정뿐 아니라 해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도록 명확화했다. 또 현재 사용 중인 '주의등급단체' 대신 '재정주의단체'라는 명확한 용어가 사용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도 의무화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나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위원회 설치의 의무화된다.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임명되며 공무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이하가 되도록 했다. 김성열 행정부 차관은 "종합적인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체계 마련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우 기자

도, 산림 돌발 병해충 예찰조사 강화

전북도가 산림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예찰조사에 나선다. 전북 산림환경연구소는 도내 307개 조사구에서 예찰조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돌발 병해충에 의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찰조사를 통한 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이에 따른 초동방제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이에 대한 방제방법을 공유하거나 친환경 방제약종 선발을 위한 연구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양현욱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도내 소나무재선충 병 검출도 8,622건을 실시하여 이중 353점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을 확인하는 등 돌발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 반딧불이 생태공원 예정지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전주천 상류지역 일대에 조성될 검토 중인 전주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예정지에 대한 현장활동에 나섰다. 행정위원회는 19일 전주 반딧불이 생태공원 부지매입 예정지를 찾아 반딧불이 서식 및 주변생태 여건, 부지매입 계획 등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활동에 나선 오광근 행정위원

장은 "반딧불이 등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타당할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성장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24년까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생태관광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공고 제 2016-1281호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이용규제기본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1.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안) 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중합리싸이플랫폼)을

구분	소재지	면적	기타	비고
신규	전주 중앙동 1가	1,100㎡	1,100	1,100

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전주환경사업소)

구분	소재지	면적	기타	비고
신규	전주 중앙동 1가	1,100㎡	1,100	1,100

2.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안) 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중합리싸이플랫폼)을

구분	소재지	면적	기타	비고
신규	전주 중앙동 1가	1,100㎡	1,100	1,100

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전주환경사업소)

구분	소재지	면적	기타	비고
신규	전주 중앙동 1가	1,100㎡	1,100	1,100

3.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안) : 상용 생략

4. 열람사항

가.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나. 열람내용: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안)

다.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전주 시청 생태도시계획과(281-2418, fax)281-2615)

라. 기타사항: 공람장소내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우편, 팩스, 이메일(sanng44444@korea.kr),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7. 20. 전주 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